

Contents

| | |
|-----------------------|---|
| I. 중소기업 경기전망 | 1 |
| II. 이슈브리프 | 2 |
|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방안 | |
| 일본 하청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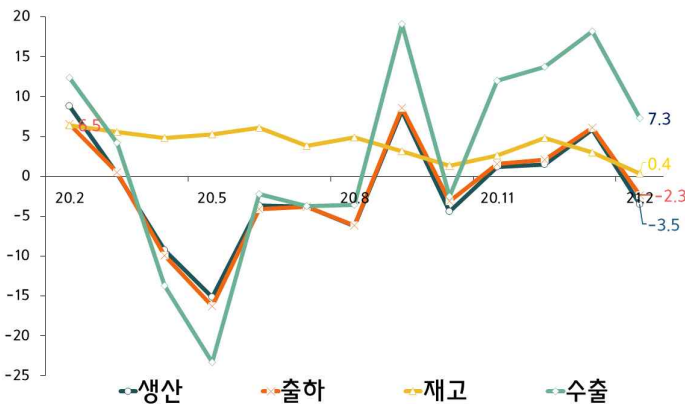
| | |
|---------------------------|---|
| III. 중소기업정책연구 | 4 |
|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방안 | |
| 일본의 중소기업 조합제도를 활용한 신사업 전개 | |
| V. 쉽게 읽히는 경제 | 6 |

중소기업 경기전망

동향

| 수출 | 생산 | 출하 | 재고 |
|----|----|----|----|
| | | | |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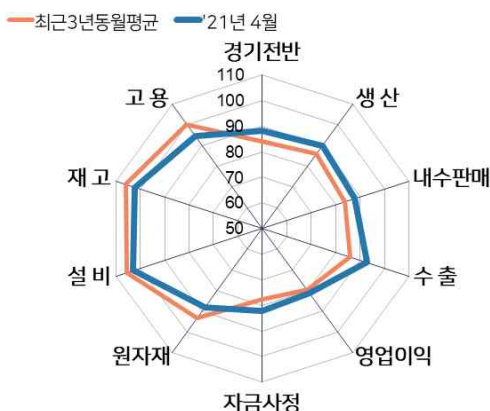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연구원

- '21년 2월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3%로 4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21년 1월 기준(전년동월대비 +18.2%)보다는 10.9%p 하락했으나, 일평균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3.8%로 큰 폭으로 증가
 - * 2월 조업일수는 19.5일로 전년동월대비 3일 감소
- '21년 2월 중소제조업 생산·출하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반면, 평균가동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21년 2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9.8%로, 전월대비 0.2%p 상승, 전년 동월대비 0.2%p 상승

전망

| 경기전반 | 생산 | 내수판매 | 수출 | 영업이익 | 자금사정 | 원자재 | 설비 | 재고 | 고용 |
|------|----|------|----|------|------|-----|----|----|----|
| | | | | | | | | |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 '21년 4월 경기전망지수는 80.5로 3개월 연속 반등 (전월비 4.3p 상승)
- 코로나 백신접종 본격화로 경기회복에 대한 잠재적 기대 심리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으로 경기전망 지수 80p대 회복
- 최근 3년간 동월 SBHI* 항목별 평균과 비교한 결과 원자재 전망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 기대
 - * 100 초과시 긍정 전망 / 설비, 재고, 고용은 역계열 해석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방안

※ 본 원고는 본회의 지원으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업 (주)캠토피아 박상희 대표가 수행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전문가 양성방안(‘21)』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캠토피아 대표이사 박상희

I 국내 환경규제, 美·EU에 뒤처지지 않을 수준

- ‘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12년 불산 유출사고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사고, 매우 강력한 환경 규제 도입 요구
 - 지난 7년 이내 새로운 환경규제들이 도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령(화평법, ‘15년 제정)
 -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15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면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8년 제정)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19년 전면개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20년 제정)

II 강화된 환경규제 주요내용과 中企애로

- 中企, 내부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제·개정 내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 실제적인 대응을 위한 예산의 제한 등으로 환경규제 위반으로 인한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실정
 - 2030년까지 각 환경규제의 의무사항들이 집중되어 있어 中企에게는 장기적·체계적 대응 필요

II 강화된 환경규제 주요내용과 中企애로

- 화학 3법(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등 中企 현장에서 어려움을 갖는 핵심적인 법

| 구분 | 의무사항 | 주요이슈 |
|-------------|----------------------------------|---------------|
| 화평법 |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톤수별 유효기간 내 등록 | 제조·수입 원부원료 관리 |
|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최초정기검사, 안전진단 등 | 사업장 시설안전관리 |
| 화학제품 안전법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신고, 승인 등 | 제품 품질 및 승인 |
| 산안법 | 톤수별 화학물질 및 제품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의무 등 | 고객대응 및 공급망 관리 |

- (화평법)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술인력 부족
- (화관법) 시설안전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예산부족 등
- (화학제품안전법) 코로나19에 따른 살균·소독제품 제조 中企증가, 국립환경과학원 승인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필요*
 - * 살균제품의 경우 ‘22년 12월 31일까지 승인 완료되어야함
- (산안법)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객기업에 제품 전달시 함께 제시필요, 적절히 대응 못할 경우 영업활동 피해 우려

III 中企 환경규제 대응현황 및 문제점

-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中企지원을 하나, 각 규제별로 개별적·일시적 지원
 - 환경규제 대응인력에 대한 핵심역량 강화보다는 자료 생산비용 지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컨설팅 등 지원
 - 또한 지원의 문제점으로 ①분산되어있는 문의 및 지원 주체* ②법규설명 중심의 교육 등을 꼽을 수 있음

<참고> 화평법 관련 문의처

| | |
|-------------|-------------------|
| 법 해석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 일반문의 | 화학안전산업계 지원단 |
| 등록관련 기술적 문의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등록평가팀 |
| 화평법 자료생산지원 | 한국환경안전공단 흡입안전성평가부 |
| 위해성자료 작성지원 | 화학물질관리협회 |

- 中企 환경규제 대응은 여러 개의 규제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초로 환경이슈를 명확히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것이 필요
 - 中企는 환경규제 대응에 있어 대기업보다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규제들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음
 - 제조·생산·취급하는 화학제품들은 대기업에서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틈새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

IV 中企 환경규제 전문가 양성 및 적용방안

- 환경규제 대응은 규제에 따른 의무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설명 및 교육에 집중되었음
- 1:1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환경규제 주치의” 개념과 여러 전문가 집단들이 협진을 하는 종합 병원과 같은 개념이 함께 지원될 수 있는 체계 필요
 - 환경규제 주치의 인력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센터를 설치, 전문가로 육성하며 국가차원에서 환경규제 주치의들의 인지도를 높여 전문 인력 구인시에도 장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이점을 부여
 - 현장에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시니어 인력들을 中企 주치의로 교육 및 양성시킴으로써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을 것

일본 하청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 본 원고는 본회의 지원으로 수행된 전주대학교 허문경 교수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발전방향 연구(21)』 내용 중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입니다.

I 日 하청사업자 현황

- 日민법상 하청의 정의는 몇 차례 변경되었지만 용어 자체는 변경되지 않음
 - 원청사업자는 ‘자본금·출자금(개인의 경우는 종업원 수)’이 하청 中企보다 큰 사업자로 정의
 - 하청사업자는 ①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은 3억엔 이하 또는 300인 이하(개인포함), ②서비스업은 5천만엔 이하 또는 100인 이하(개인포함), ③고무제품제조업은 3억엔 이하 또는 900인 이하(개인포함)로 정의
- 일본의 하청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47.9%
 - ‘20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급기업 비중은 46.8%

II 日 하청사업자 혁신사례

- 원청사업자가 생산공정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사례 발생
- 하청사업자가 다른 하청사업자와 연대하여 대응
 - 인재나 노하우 등의 경영자원을 보완하고 기획·설계·영업 기능을 보유하여 대응 가능한 범위를 넓힌 ‘과제 해결형 비즈니스’를 추진
 - 대응사례의 조직형태를 보면,
 - △하청중소기업 가운데 리더를 선정, 수주시 역할분담을 사전에 결정하는 ‘기존기업활용형’
 - △대기업이 하청사업자의 수요 파악과 거래처 개척 등을 지원하는 ‘대기업 서포트형’
 - △하청사업자의 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 출자법인이 대외적인 거래 창구나 대내적인 활동의 중심이 되는 ‘제휴사업법인 설립형’ 등이 있음

日하청사업자 제휴 사례

① 주식회사 제네럴 프롬프트

일본 전국의 중소기업 110개사가 참여하여 △생산관리 △품질관리 △생산기술을 관리하여 자동차산업의 1차 서플라이어로 인증 받음

② 토레이 합섬 클러스터

선발기업은 섬유산업의 첨단경쟁력을 유지하고 후발기업의 생존 경쟁력도 확보하기위해 민간 98개사가 참가

III 日 『하청중소기업진흥법』 등 제도

- 하청중소기업진흥법은 1970년 제정
 - ‘03년 서비스업을 포함한 하청사업자의 진흥을 위해 대상을 서비스업 등 하도급 中企로 확대
- 원청사업자와 특정하청조합이 작성한 진흥사업계획에 대해 진흥기준에 근거하여 심사·승인하고 **유동자산 담보보험특례*** 등 자금지원
 - *中企가 소유한 외상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한 용자로 최대 2억엔까지 대출가능
 - 진흥기준에서는 원청사업자에 의한 협력, 하청사업자의 자조 노력, 상호 협의에 근거한 적절한 거래관계 구축 등을 규정

① 원청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발주내용의 명확화
- 하도급대금 지불 방법의 개선, 거래 정지의 사전예고 등

② 하청사업자가 노력해야 할 사항

- 고성능 설비의 도입
- 연구개발의 추진, 효과적인 경영기법 도입 등

③ 협의해야 할 사항

- 대금 결정 방법의 개선, 납품 검사 등

- 원청사업자와 하청사업자가 협력하여 진흥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것과 더불어 원청사업자가 발주 분야의 명확화, 발주 방법이나 거래 조건의 개선 등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승인신청의 요건
- ‘18년 진흥기준은 하청사업자의 불이익이 되는 거래나 요청을 하지 않으며,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불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 진흥사업계획을 실시한 하청사업자에게서 실시 전후 상당 정도의 생산성 향상이 나타난다는 평가

- 이외에도 日중소기업청은 ‘하청 피난처’를 운영 중

- 하청기업진흥협회의 협력을 얻어 전국에 48개소를 설치, 기업 간 거래와 관련한 각종 상담 및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 등을 지원
-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는데도 단가인상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등의 사례를 정리, 정보제공 또한 수행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기능 강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노민선

※ 본 원고는 필자가 작성한 중소기업연구원 포커스 20-24호(2020)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I 中企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필요성

- 정부, '20년 기준 中企지원을 1,754개 사업을 통해 26조 1,406억원 예산 투입
 -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수는 30.2%(407개), 지원사업 예산은 57.7%(9조 5,600억원) 증가
-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中企지원사업을 추진, 유사·중복사업이 많고 정책수요자인 中企혼란 초래
 - 국회를 중심으로 中企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등 中企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개선요청

II 中企 정책의 총괄·조정 현황 및 문제점

- '18년 「中企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中企정책 총괄·조정권한 부여
 - 中企보호·육성 관련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설치
 - 中企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조정
- 하지만 지원사업의 평가 및 협의결과가 예산으로 연결되는 장치가 미흡, 이행 강제력이 부족
 -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위원은 타 심의기구와 달리 차관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조직법」상 중소벤처기업부 관장 사무에 中企정책의 총괄·조정내용 제외
 - 이에 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산의 배분·조정권한 부여

국내 정책 총괄·조정 현황(中企 vs. R&D)

| 구분 | 中企 | R&D |
|----------------|--------------|-----------------|
| 근거법(부처) | 中企기본법(중기부) | 과학기술기본법(과기정통부) |
| 정책조정(시행) | 총괄·조정('18.6) | 예산 배분·조정('06.3) |
| 예 산 심 의 의 결과통보 | 심의대상 |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
| | 검토내용 | 없음 |
| | 결과통보 | 투자우선순위 등 |
| 심의기구(소속) | 中企정책심의회(중기부) | 과학기술자문회의(대통령) |
| 부처 관장사무 | 中企정책 기획·총합 | 과학기술 정책 수립·총괄 등 |

자료 :노민선(2020) 재정리

III 해외 中企 정책의 총괄·조정 사례

- 미국 중소기업처(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연방기관이 시행하는 中企지원정책 조정권한 보유
 - 대출정책위원회를 구성, 中企금융지원 사업에 대한 승인과 거절을 규정하는 조정정책 수립
 - 中企소달자문위원회와 中企제조대책위원회를 구성, 관련 정책을 추진
 -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시행을 총괄하고 진행상황을 검토
- 스페인 중소기업 및 기업가 정신 국가위원회(State Council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Entrepreneurship), 中企 및 기업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수단 등을 기획·조정
 - 전원회의와 실무회의로 운영되며 정부부처, 국가기관, 자치구, 지방정부, 中企노사 대표자 등 총 52명으로 구성

IV 中企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방안

- 「中企기본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 ① 中企정책 총괄·조정 기능 기구의 위상 제고
 -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하고 현행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실무기구로서의 역할 부여
 - 중소기업위원회는 의결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안건을 사전 조정하는 역할 수행
 - ② 중소벤처기업부에 中企지원사업 예산 배분·조정기능 부여
 - 기획재정부가 中企지원사업의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중소벤처기업부가 배분·조정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통보
 - ③ 중소벤처기업부 관장 사무에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내용 명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의 관장 사무에 과학기술 정책과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총괄·조정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

일본의 중소기업 조합제도를 활용한 신사업 전개와 시사점

※ 본 원고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정책동향 브리프」(2017.4.30) 중 '일본의 중소기업 조합제도를 활용한 신사업 전개'를 발췌·정리한 것입니다.

I 日, 中企 조합에 의한 신사업 전개 기대

■ 中企 조합은 '규모의 경제 실현'과 더불어 中企의 이동성, 유연성, 창의성 등을 살려 '경영 자원의 상호 보완' 도모를 위한 조직으로 자리매김

- 타 업종 제휴를 통한 신사업 전개와 혁신 창출 기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새로운 연계 조직제도 탄생
- 조합제도는 조합 사업에 새로운 분야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추가 등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II 신사업 전개 주요사례

① 돗토리현 판금공업조합

■ 지도조사사업, 공동경제사업 수행

- 지도조사사업 : ▲지도 및 교육사업 ▲정보·자료의 수집·제공사업 ▲조사연구사업 등
- 공동경제사업 : ▲공동구매·공동수주사업 ▲공제제도 관련 대리업무 사무대행 ▲노동보험사무조합에 관한 사업 ▲책임시행보증사업 등

■ 신규사업 : 태양광 발전시스템 시공 사업

- 조합이 창구가 되어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하고 공사에 필요한 패널 등을 공동구매
- 조합원에게 시공을 의뢰, 공사를 공동실시
- 공사 완료 후 조합이 검사하고 공사 의뢰자에게 대금을 청구하며, 대금 회수 후 각 조합원에게 시공비를 지불
- '14년 약 3천만엔, '15년 약 2천만엔 매출

② 핫사무키타 상가진흥조합

■ '06년 할인점, 편의점 출점으로 경쟁 심화

- 상가고객 및 조합원 수 감소

■ '08년 '지역 사회와의 관계 회복', '지역에 도움이 되는 상가'를 목표로 상가 재생을 위한 노력 시작*

* 슬로건 : 『40년 후 핫사키무타 상가를 삿포로에서 제일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자』

■ 신규사업 :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역할 수행

- 경제사업 : ▲커뮤니티 및 레스토랑 운영, ▲하쓰키타 생활 안심 창구, ▲데이 서비스(노인복지 서비스 등) 등
- 비경제사업 : ▲지역 학교 연계 스노우 캔들 만들기, ▲학교 화장실 청소, ▲상가 직업 체험 등

③ AISOHO* 기업조합

* AI는 '愛', '자유로운'을 뜻함

SOHO는 Small Office Home Office를 의미

■ 일할 의욕이 있는 개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지역고용을 증진하는 것이 조합운영 방식

■ 조합원, 조합전임 직원, 등록 재택 근로자(여성·장애인 등)가 협력하여 업무 추진

■ 신규사업 : IT 관련 아웃소싱 업무, 고객주문 접수, 해당 업무 관리 수행

- 조합 임원 중심 업무 수주
- 조합원과 등록 재택 근로자의 희망과 능력,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분담업무 결정
- 조합원 관리·지도·지원 실시, 업무품질 유지·향상을 위해 재택 작업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 실시
- 육아, 간호, 질병 등으로 일반 기업 근무가 어려운 주체들에게 조건에 맞는 취업 기회 제공

III 시사점

■ 中企, 기동성·유연성 측면에서 대기업보다 우위에 있지만 개별기업의 힘이 약함

-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제약들을 극복하고,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확보하는데 있어 '조합제도'는 중요한 대안의 하나

■ 일본 中企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서 지역 행정 및 기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사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와 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유용할 것

일본의 출향(出向)과 미국의 앙코르 펠로우십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년 중소기업 46.5%가 필요인원 대비 적은 수의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49.8%의 중소기업은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부족하여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참 관찰은 중소기업 하반기 채용동향 조사』(中企중앙회, '21.3월)
중소제조업 현장에서 외국인력 부족 문제 또한 악화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외국인근로자 신청인원은 1만 1,000명인데 반해 배정인원은 4,500명인 수준입니다.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은 많으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속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전문·경력인력 부족 등의 인력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을까요?

일본의 출향(出向)제도

출향제는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의 고용 관계를 유지한 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항공 수요가 급감하자 전일본공수(ANA)와 일본항공(JAL)은 객실 승무원과 여객 담당 직원 일부를 전자제품 판매 대리점으로 출향했습니다. 전자제품 판매 대리점은 전문적인 고객응대 능력을 갖춘 항공사 인력들을 받아 기존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日고용제도 출향(出向)』(프레스맨 '20.12월)

전문가들은 일본의 출향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해고를 피하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추후 숙련된 근로자들을 복귀시킬 수 있으므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향제도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경영지도,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출향처 강화형입니다. 둘째, 출향자의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훈련형입니다. 셋째, 출향처 기업과 연계를 강화하거나 신규

회사의 설립과 함께 이루어지는 '기업집단통합형' 등이 있습니다.*

*『일본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 철강산업사례』(노동연구원 '06.4월)

미국의 앙코르 펠로우십

앙코르 펠로우십은 민간부문 퇴직자들이 비영리기관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민간 부문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중장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교육, 환경, 보건, 사회복지 등의 사회영역에서 경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미국 23개 주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한 사람 95%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앙코르 펠로우십은 4개 운영주체가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우선 사회영역에서 일하는데 관심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으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자(Program Operators)는 전문인력과 조직을 매칭시키는 또 다른 조직입니다. 이들은 전문 인력을 선발하고 일자리 수요를 찾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정책 강화 연구』(中企중앙회, '20.12월)
독일에서도 이와 유사한 Initiative 50plus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50세 이상 인력을 민간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제도들의 국내 적용을 위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10년 日출향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당시 노동계는 대기업 노동자의 퇴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등을 우려하였습니다. 경영계는 우리나라에 시행된 사례가 없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日출향제도 국내에서 시행한다면』(매일노동뉴스 '10.11월)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연구주제 제안
- 기고 및 연구진 참여 신청 (이력서)
- KBIZ정책브리프 운영방안

기타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또는 문의 주실 분들은
kbizlab@kbiz.or.kr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